

목어

부드러운 전쟁에는...

"밝아오는 새천년, 이제 우리 민족의 천년입니다."

요즘 공익광고협의회에서 매체들을 통해 내보내고 있는 이 문구에는 무언가 분명 빠져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우리 민족이 살아왔고 또 살아갈 세월이란 그것이 웅비의 모습인 불운한 것이든 어디까지나 우리의 백년이고 우리의 천년이지 남의 것이 될 수 없는 일 아닌가. 말하자면 우리 민족이 '세계의 중심축'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세계의 변방'이냐 말건지 지키겠다'거나 그런 서술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것이다.

어찌되었거나 '우리 민족의 새천년'을 빛내기 위해서는 오래 전 이미 시작된, 그리고 승패가 거의 가늠나 보이는 '문화전쟁'을 논여겨보아야 한다. 문화전쟁이란 민족생존과도 직결된 것이어서 전쟁은 분명 전쟁이요 폭력이 배제된, 그러면서도 패자에겐 치명적인 수위에 없는, 어쩌면 달콤하기까지 한 '부드러운 전쟁'이다. 그리고 한국문화에는 (무엇하건 하건) 어쩌면 패적이 드리우는 것 같다. 그 중후야 이 좁은 지면에서 일일이 들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널려있음을 본다.

자국의 문화가 살아야 민족이 산다는 증거는 시립왕궁의 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었던 시립은 20세기 지도에서 사라졌고, 불교문화를 근간으로 고유문화 유지를 힘썼던 부단은 지금도 세계에서 독특한 위치를 지니고 있다.

한국문화에 드리우는 패색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한국에도 예부터의 모든 전통문화가 아우르며 독특하고 고유한 정신문화의 지평을 넓혀왔던 한국불교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불교는 위로는 한국선(禪)으로 대표되는 높은 정신성과 아래로는 많은 신화 전설 등으로 대중예술성을 풍부히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문화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지금 서구문화에서 '뜨는' 그 무엇이든 세계화의 힘을 빌어 전에 없는 강한 전파력으로 금세 지구촌을 정복한다. 지구촌은 또 그것을 현대인류문화의 보편성인양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래서 한국불교의 짐은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

김정자(언론인·본지 논설위원)

공원내 사찰 역할 너무 몰라

'문화재 관람료' 또다시 화두로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분리징수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제기했던 예전과 달리 시민운동단체에서 문제가 터져나왔다는 점에서 조계종의 입장은 신중하면서도 조계종은 이번 기회를 통해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를 풀어주는 계기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참여연대가 문화재관람료 반환소송을 내겠다는 이유는 "관람하지 문화재에 대해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시민의 권리를 침해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 입장 "현재 국립공원 입구에서 공인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합동징수함으로써 문화재관람을 원하지 않는 공인입장객에 대해서도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해 이에 다른 민원과 여론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공인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의 합동징수가 분리징수로 전환되고 각각의 법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 조운연 간사는 "국가 지정 문화재를 보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강제로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우리는 문화재를 관리해 온 사찰이나 종단을 상대로 싸움을

참여연대 소송 놓고
조계종 "오해푸는 계기로"
"국립공원 10% 이상
사찰소유 토지"

벌리려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찾는 것"이라며 소송 준비 배경을 설명했다.

조계종 입장 조계종은 2월 22일과 24일 잇따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연환경과 문화재 보존에 기여해온 사찰과 스님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합동징수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특히 사찰의 토지, 문화재, 자연환경을 국립공원에 제공했음에도 시민의 권리라는 이름으로 그 동안의 공헌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은 참여연대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전체 국립공원 지역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조계종 사찰토지가 국립공원 내에 편입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기획실 황찬익 과장은 "스님과 사찰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한다면 시민 개개인에게 미치는 금전적 권리를 지키려하기보다는 자연환경 권이나 전통문화 향유에 관한 보다 큰 권리를 일깨우고 추구하도록 계몽해야

할 것"이라고 참여연대에 요구했다.

조계종은 또 문화재를 개체 문화재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환경까지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치 국보 1호 남대문 주변에 고층건물이 들어선 남대문이 지닌 가치와 위상이 손상된다는, 따라서 문화재의 관람 행위도 공간적으로 확대 해석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문화재위원들도 공감하고 있다. "문화재를 둘러싼 환경이나 비정형 유적·유물도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문화재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송의 당사자가 될 스승사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소송에 대비하고 있다.

교계 일각에서는 참여연대의 소송에 대해 형평성을 상실한 처사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한다.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의 한 회원은 "해인사 통도사의 경우 대부분이 사찰내 방백인데, 참여연대의 논리로 한다면 공인입장료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시민권리 차원에서 타당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불자는 또 "참여연대에서 조계종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특정종교단체와 국립공원관리공단만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는 의혹을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7일 열리는 토론회 결과에 따라 소송을 안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소송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상태



참여연대의 문제제기로 공인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징수방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스님의 안내로 법주사를 관람하고 있는 관광객들의 모습.

를 소송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토론회를 기점으로 문화재관람료 반환 및 공인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징수 방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립공원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도 뒤따를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문화재 관람을 원하는 사람에겐만 관람료를 징수해야 하므로 분리징수를 주장하고 있다. 조계종은 매표인력 절감 및 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현행의 합동징수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관람료 징수 현황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 39조(국가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

수할 수 있다)에 근거해 62년부터 받고 있다. 관람료는 성인 1인 기준 700원에서 2000원까지이다. 대체로 1000원 또는 1200원이다. 반면 국립공원입장료는 70년부터 받아왔다.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조계종 사찰은 65개 사찰이며, 이 가운데 합동징수하고 있는 곳은 19개 사찰이다. 관람료 사찰이 소유한 문화재는 국보 40, 보물 167점 등 모두 521점에 이른다.

지난 해 조계종 관람료사찰 입장객은 2천1백1만명, 관람료는 267억여원이었다. 올해 조계종 예산안 가운데 관람료사찰의 특별부담금은 25억여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20%를 차지, 직영사찰분담금 다음으로 비중이 높다.

정성운 기자

"포교-교육 역점 종단체질 개선을"

조계종 교육원 '승가의 과제' 좌담회

"종단의 체질이 포교와 교육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이 2월 23일 개최한 '종단사태와 교훈과 승가의 과제' 좌담회에서 교육원 장인과 중앙승가대학 총회 선방 대표 등 종단의 스님들은 종단분규 원인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권력구조 형식의 총무원 조직을 축소하고 전법도생의 종단인임을 구현하기 위해 교육·포교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모범담안을 제시했다.

이날 좌담회는 포교, 수행, 교육의 3대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종단인내 정착 중요시되는 포교, 교육분야는 예산편성에서 소외되고 종단을 유지하는 총무원 조직만 비대화돼 권력집중 현상을 낳았다는 지적에서 출발한다.

올해 중회에 상정된 예산안의 경우도 교육, 포교예산이 22%, 13%인데 비해 총무원 예산은 39%에 이른다. 예산 7억도 총무원이 5억9천여만원, 교육원 1천2백만원, 포교원 2억3천만원으로 승중전직과 전법에 역점투자를 바라는 종도들의 여론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산편성과 정책의 결정권이 총무원

"총무원 집중 예산 편성
종권 분쟁 계속 발생"

에 집중돼 증권유지를 위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여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다는 분석이다. 이는 비대한 구시대 구조를 청산하고 내실을 기하는 교육과 포교를 강화하지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증원증법을 제·개정하여 총무원의 규모를 줄이고, 종무직제도 평등한 승가의 운영원칙에 맞게 권한보다는 일하는 소임으로 자리매김하여 권력구조적인 문제를 해소시키자는 것. 또 비효율적인 하향식 구조도 개선해 서비스위주의 증무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후 종단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하고 승중전직을 통한 승가의 바람직한 진로를 위해 종단의 정체성확립이 시급한 과제인 만큼 승가교육과 포교분야에 체계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전국 교구 본·말사스님들의 바람과 같이 종단운영이 승려의 자질향

상, 수행정신회복, 승가제도과 법제제도 실시, 행정교육원 신설, 중앙연수원 건립, 포교프로그램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춰 지속적인 승려 계율교육, 승려 재교육을 통한 인성교육과 행위교육실시로 압축된다.

좌담회에서는 또 종단분규 발생시 폭로전, 대규모 집회, 물리적 충돌로 진행되는 것은 불교집단에 만연한 세속주의에서 기인한다 분석하고 승가문제 발생시 해결주체 선정과 불교정신에 맞게 풀이할 자질향양, 방법연구, 토의및 평가문화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종단분규를 원천적으로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천주교처럼 문제발생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출가자들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사회법리에 따르지 않고 종단내부 결정에 따른다'는 각서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이날 좌담회는 황적스님(총회교육분과위원회 간사)의 사회로 무비(승가대학원장) 총법(중앙승가대 교수) 도법(화엄학원 운영위원장) 지오(해인승가대학장) 혜국(남국선원장) 계성(교육원 교육부장)스님이 참석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종단별-조불련 회동 '우려'

대북 교류창구 단일화 안되나

조불련이 일정 기간을 정해 개별적으로 남북의 종단 및 통일운동기구 대표들을 만나자고 한 것은 지난 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그 이전에는 부처님오신날과 8·15를 앞둔 공동발원문을 협의하기 위해 상호 협의에 의해 조계종과 평불련이 조불련과 만남을 가졌다.

조불련이 여러 종단을 차례대로 만나는 것은 각 종단별로 북한불교와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고, 이를 조불련이 적절히 상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조불련의 사정상 한번에 북경에 나와 여러 종단을 접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도 작용한다.

일정 기간을 정해 우리측 종단·단체들과 잇따라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의 제안에 응하기로 한 것에 대해 우려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종단간의 과시적 경쟁을 부추겨 지원을 극대화하려는 조불련의 의도에 충실하게 따라야 하느냐는 것이다. 조불련이 남북 불교계와 대화테이블을 갖는 것은 불교 교류라는 명분과 함께 지원을 바라

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적에는 조불련과의 회동이 남북간의 화해분위기 조성에 불교계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또 장기적인 남북불교교류의 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가운데 만남은 만남 이상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지난 해 11월 북경에서 조불련 대표들을 만나고 돌아온 종단협의회와 각 종단은 남북불교교류는 종단의 실정에 맞게 실시하나 창구는 종단협의회로 단일화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남북불교교류와 관련해 종단협의회에서 조정 권한을 가지지 못함으로써 '종단협의회 창구단일화'는 의미가 없다.

이에 따라 종단협의회 내에 설치되어 있는 남북불교교류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이 필요하다. 더욱이 올해 남북불교교류가 빈번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종단간 남북불교교류 협의와 정책개발을 위한 활동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 기사 넘쳐 '선과 21세기' 한주 쉽니다.

쌍용양회 석회석발파로 인한 삼화사 사찰환경보전 대법회

두타산 삼화사는 지금부터 1,300여년전 신라시대(A.D 642년) 자장율사께서 창건하신 도량으로 신라시대 삼국통일의 염원지였으며 일제시대에는 의병들의 은거지로서 삼국사기와 동국여지승람등에 기재된바와 같이 민족의 염원과 호국의 성지입니다.

지금도 신라시대의 국가지정문화재 철불(보물 제1292호), 석탑(보물 제1277호) 등이 봉안된 도량으로 천삼백여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사찰(동해시 제10호)입니다.

그러나 지난 1977년 국가의 산업화정책으로 60여만평의 사찰부지와 전답이 쌍용양회측에 강제 매수되어 공장부지와 석회석 채취장으로 변모하여 지금의 무릉계곡 입구로 이주하여 있습니다.

1998년 폐사된 법당 등을 신축 복원하고 국가지정문화재(철불·석탑)를 지정 받는 등 계속 불사를 진행하며 기도 참회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쌍용양회의 매일 2회 석회석 채취 발파로 인하여 신축된지 2년도 안된 국가지정문화재 철불보호각인 법당이 훼손되고 지반이 흔들리고 목재가 뒤물리며 벽이 금이가고 균열이 생겨 사찰수행 환경 파괴와 종교활동(참선,기도)을 할 수 없는 불안 공포 스트레스의 정신적인 장애요인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는 삼화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범종단적인 사찰환경수호와 국가지정문화재보호와 백두대간 등 환경파괴 행위에 대하여 규탄하며 입장을 천명하고 다음사항을 결의한다.

삼화사 사찰수호환경보전대법회

일시 : 불기 2544년 양 3월 6일(음 2월 1일) 오전 11시

장소 : 두타산 삼화사

결 의 사 항

1. 쌍용양회는 삼화사 주위에서 석회석 채취발파를 즉각 중단하고 강원도 건축사회에서 조사한 피해 감정액을 전액 보상하라.
2. 강원도와 동해시는 삼화사 국가지정문화재(철불·석탑) 보호와 사찰수행환경 보전의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3. 강원도는 쌍용양회 석회석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 환경 등의 영향평가를 위한 각 기관 단체(조계종총무원, 쌍용양회, 문화재청, 환경부, 강원도, 동해시.)의 조사위원회 구성과 공청회를 개최하라.
4. 쌍용양회는 경제성장을 빌미로 하여 국가지정 문화재훼손과 사찰수행수행환경 파괴 백두대간의 자연경관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5. 상기 사항이 관철될때까지 이전만 불교도와 범종단적 쫓기 및 항의 투쟁 민형사간 법적 투쟁을 결의한다.

불기 2544년 2월 일

대한불교조계종 삼화사 사찰수행환경보전 대책위원회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176번지
☎(0394)534-7661~3, 7668, 8313
FAX (0394)534-7546